

끝나지 않은 트럼프發 관세전쟁

‘관세유예’ 한숨 돌린 전력기기 업계… 美공장 증설 박차

제조업 회기에 전력난 심화 초래
전력기기 압박 쉽지않을것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던 전력기기업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일정 부분 여유를 확보하며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전력기기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 기존 25%였던 관세가 10%로 낮아지면서 성장세를 이어가던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에서 제기됐던 수출 차질 우려도 완화된 분위기다.

당초 미국의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붐은 빅테크가 AI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구축에 대규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美 앨라배마 2공장 증설 진행중
2028년 연매출 3000억 증액 전망

효성중공업

멤피스 증설 후 추가증설 검토

LS일렉트릭

반덤핑관세 적용, 관세영향 클 듯

모 투자를 이어가며 확산돼 왔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경우 기업들도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제조업 회귀(리쇼어링)를 가속해 전력난 심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전력기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세 압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는 수요 흐름이 견조하더라도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 영향 가능성이 열려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리스크 대응에 한창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 제2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울산과 함께 미국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8년에는 연간매출액이 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효성중공업 또한 멤피스 공장 증설 완료 후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아직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텍사스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LS일렉트릭이 국내 주요 변압기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국내 주요 변압기 제조업체들에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 통보했다. LS일렉트릭은 16.87%를 부과 받았고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은 반덤핑 관세를 피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지 생산 시설 유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공장이 없고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미국향 매출 비중은 37%로 지난 2020년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선 반덤핑 관세율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국내보다 북미 판매가격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에도 향후 반덤핑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제조업 회귀를 촉진시키고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관세 압박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업체별 생산 능력 확대가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車 부품업계, 존폐 위기… ‘울며 겨자먹기’ 美 현지화

완성차 업체는 버틸 체력 있지만
車 부품업체 95%이상 ‘영세업체’
생산 감소 등 연쇄타격 가능성 커
일부 美 현지화, 일자리 감소 우려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현지화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의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지난 2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부담이 견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금액은 51조원에 달한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미국 수출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는 버틸 체력이 있지만 부품 협력업체들은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HMGMA(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앨라배마(현대차) ▲조지아(기아) 기존 공장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HMGMA는 향후 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증설을 통해 미국 내 생산규모를

120만대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전체 생산 물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GM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 총 49만9559대 중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42만대에 달한다. 인천 부평공장 철수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버틸 체력’이 있는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많은 부품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5월 3일 이내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부품업체의 연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19 시절보다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부품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약 2만여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으며 이중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미국의 관세 부과시 수출 위축과 함께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일부 규모가 큰 1차 협력 업체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내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미국 생산량 확대 전략에 맞춰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며 “(우리회사의 경우) 트럼프 관세부과로 국내서 부품을 수출할 경우 1년간 1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제조업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현지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완성차·부품 산업부터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늘리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조원의 긴급 유동성 투입과 함께 내년 정책금융 자금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지주 핀테크기업 ‘금융사 소유’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사, 핀테크 지분 15% 출자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 내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과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만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출자 범위를 15%로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등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AI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업무는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단,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기간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조사위 구성

국토부, 수습복구·불편 해소방안 논의

정부가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해 전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백원국 2차관이 주재하는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이 참여해 구조 현황 및 현장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조속한 수습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사고당시 2명이 매몰됐으나 전일 한명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실종자 1명은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수색 중이다. 사고 지점을 포함해 오리로 양방향 1km 구간을 통제 중이며, 주변 지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표계 및 구조물 경사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변부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광명시에서 주민대피명령은 해제한 상태다.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